

## 특별강연-세계경제불안과 경제성장의 New Paradigm



이필상,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전 총장

### 1. 금융자본주의 위기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인한 금융불안이 일파 만파로 퍼지고 있다. 이로 인해 금융이 세계를 지배하는 금융자본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 금융산업의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한국경제는 피해자로서 타격이 크다. 경기침체와 물가불안의 이중고 속에 밀어닥친 금융 파도는 우리경제를 극도의 위기상태로 몰고 있다.

1980년대 이후 각종 금융규제가 사라지고 국경이 없어지면서 금융자본주의는 날개를 달았다. 당연히 배후에는 달러를 기축통화하여 세계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미국이 있었다. 일본과 독일 등 경쟁국가들의 제조업경쟁력이 높아지고 세계시장 점유가 확대되면서 미국경제는 점차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위협받게 되었다. 그러자 미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하게 발전한 금융을 주요 경쟁수단으로 삼았다. 세계 각국에 대해 금융시장개방압력을 가하며 자국의 자본에게 공격의 길을 터주었다. 이때 미국은 증권산업과 파생상품시장을 급격히 발전시켜 어느 나라도 금융상품과 기법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확고한 위치를 확보한 상태였다.

서브프라임 사태가 확산되면서 국제금융질서는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향후 신용위기가 확산되어 국제금융시장의 마비가 닥친다면 이는 사실상 금융자본주의의 붕괴위기이다. 이 과정에서 실물경제는 극도의 침체 상태가 되어 근로자들이 길거리로 대거 몰려나올 경우 자본주의 경제는 1929년 세계 대공황 때와 유사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돈이 세계를 지배하는 금융자본주의하에 서브프라임

사태의 재앙을 촉발한 것은 미국중앙은행이 택한 저금리 정책이었다. 미국은 2000년 이후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연방기금금리를 1%까지 내리는 초저금리 정책을 폈다. 그러나 국제수지 적자와 물가불안을 막기 위해 다시 가파른 금리안상정책을 펴 2006년 기준금리를 5.25%까지 올렸다. 이후 대규모로 늘어난 비우량 주택 담보대출이 부실화되면서 금융시장에 위기의 회오리가 불어 닥쳤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맞으며 금융자본주의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었다. 경제가 부도위기를 맞고 대다수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부실화되자 주가가 폭락했다. 국제통화기금의 요구에 따라 구조조정과정에 들어간 후 종합주가지수가 최저 270선까지 내려갔다. 이런 상태에서 외국자본들이 대거 들어와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주요기업과 금융기관들의 주식을 매집했다. 이후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주가가 폭등하여 종합주가지수가 2000포인트를 넘었다. 그러자 지난해부터 외국인투자자들은 국내주식을 매도하여 대규모 이익을 실현하고 있다. 2004년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중 외국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44%에 까지 이르렀으나 이 비중이 최근 28%까지 내려왔다. 이 과정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소버린의 에스케이 공격 등 외국자본의 부당투기행위가 심각했다. 위기를 맞아 쓰러지는 경제를 사냥감으로 하여 폭리를 취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미국과 같이 저금리정책을 폈다. 따라서 기준금리가 2005년 3.5%까지 내려가자 시중 유동성이 급격히 늘고 부동산가격과 증권가격이

급상승했다. 2006년 부동산가격은 32% 올랐다. 2007년 주가는 35%나 올라 2000선을 넘었다. 이러한 거품 속에서 경기침체는 계속되고 국민들의 빚은 늘어 가계부채가 가구당 평균 4,000만원에 이른다.

투기와 물가불안이 커지자 지난해부터 정부는 미국과 같이 금리인상 정책을 폈다. 최근 담보대출금리가 10%대 까지 이르자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이 늘면서 언제 연쇄부도가 나타날지 모르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판 서브파라임 위기가 자생적으로 구조화된 것이다.

## 2. 실물경제 붕괴위험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경제부도가 나지 않는다. 부도위기에 처하면 국제통화인 달러를 찍어내면 된다. 소위 지배자의 전리품이라 할 수 있는 시노리지(seigniorage) 효과를 누리는 특권이 있다. 이 경우 경제위기가 달러를 사용하는 다른 나라들에게 이전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이로운한 최대 피해국의 하나이다.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각국 경제는 성장을 멈추고 물가불안을 겪으며 부도의 위기에 빠지는 화를 입을 수 있다.

문제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시작한 주택시장붕괴의 도미노는 유럽, 아시아 등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단계 파생상품의 투기장이 된 국제금융시장이 고층건물처럼 붕괴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이 통화발행, 구제금융, 은행 간 대출보증, 금리인하 등 갖가지 긴급처방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발등의 불을 끄는 것이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금융시장은 이미 근본적인 수술과 재편이 불가피하다. 주요 금융회사와 기업들의 퇴출, 통폐합, 구조조정 등 시장경제의 판을 다시 짜야할 상황이다.

세계경제는 벌써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위기로 전이되면서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자금이 돌지 않아 기업들의 투자, 생산, 수출이 모두 위축되고 동시에 개인소비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은 내년 세계경제성장률이 3.0%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에 비해 0.9%포인트나 하향조정했다.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은 3.5%로 전망했다. 정부가 추정하는 올 경제성장률 5.0%에 비해 1.5%포인트나

낮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물경제가 위험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성장잠재력이 크게 떨어져 정상적인 성장이 어려운 상태이다. 이에 따라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실업, 물가, 부채의 3중고를 겪고 있다. 여기에 연초부터 국제유가가 폭등하자 경기침체는 심화하는데 물가는 오르는 스테그플레이션의 고통에 휩싸였다. 체감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이 각각 외환위기 이후 최고수준인 5%를 넘었다.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들도 부실투성이다. 중소기업들 중 절반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기 어렵다. 설상가상으로 환위험을 회피한다고 키코(KIKO)에 가입하여 덤터기를 쓰고 만신창이다. 아파트 미분양 사태로 자금줄이 막힌 건설업체들은 이미 줄도산 중이다.

이런 상태에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밀어닥치자 우리경제는 성장률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서민가계, 중소기업, 금융회사들이 뒤엉켜 쓰러지고 실업자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복합불황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기로 인해 환율과 수입원가가 올라 공장들이 문을 닫는다. 또 생활물가도 함께 올라 소비가 줄고 있다. 금리가 치솟아 가계부문과 중소기업부문의 연쇄부도가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주가까지 폭락하여 평생 모은 재산을 날리는 가구도 많다. 더욱 문제는 세계경제침체로 인해 수출이 감소하는 것이다. 20%가 넘던 수출증가율이 거의 절반으로 떨어진 상태이다. 우리경제의 버팀목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심화되면 국민경제는 실업과 부도라는 극단적인 고통에 빠진다.

## 3. 청년실업과 취업전쟁

경제가 위기를 맞자 취업문제로 젊은이들의 고통이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니다. 과외수업을 수없이 받고 재수까지 하며 천신만고 끝에 대학에 들어가도 곧바로 좌절에 빠진다. 실제로 대학 4년을 공부에만 매달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해도 취업의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웬만한 공기업이나 대기업의 입사경쟁률은 수백 대 일에도 이르고 그것도 채용인원을 점점 줄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 재학 시 어학연수, 자격증 획득 등으로 졸업까지 재학기간이 평균 6년으로 늘었다.

실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젊은이들의 방황과 고통이 사회 곳곳에 흩어져 있다. 취업문제로 고민하던 젊은이

들이 반복적인 좌절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젊은이들의 취업문제가 단순한 경제적 생활 수단 찾기 문제가 아니라 사회자체를 부정하는 문제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사회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젊은이들을 벼랑 끝 생존싸움터로 내몰고 있다.

대학을 졸업 후 취업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삶이 판이하게 다르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취업을 한 사람들은 안도를 한다. 반면 취업에 끝내 실패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낙오자가 되어 좌절과 분노 속에 빠진다. 그리고 어두운 구석에 자신을 몰아넣고 자학을 하다가 극단적인 일을 저지르기도 한다. 안타까운 사실은 취업에 성공한 사람의 안도도 잠깐이라는 것이다. 적성과 능력이 부족하여 직장에 적응을 못하거나 노동을 제공하고 돈을 받아가는 소모품으로서 자신이 전락하는 것을 느끼며 직장을 일찍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다. 일단 뽑아주는 회사에 입사를 했다가 고시나 대학원진학 또는 입사시험을 재준비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고용시장은 한마디로 평생 생계를 걱정하며 직업을 찾아야 하는 불안정상태이다. 과거 고속성장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안정된 삶을 보장하고 회사와 함께 개인이 발전할 수 있는 핵심적 요인이 평생직장이었다. 학업을 마치고 취직을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생직장이 보장되었다. 이에 따라 안심하고 가정을 꾸리고 재산증식과 자녀교육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 취업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취업이 되어도 언제 그만 뒤야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까 결혼도 제대로 못하여 가족사회가 흔들리는 심각한 문제까지 야기되고 있다.

실업은 경제적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직업이 없어 자신이나 가족의 생계가 불안하다면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는가?

#### 4. 정부정책의 역주행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경제 실상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성장정책을 밀어붙이는 오류를 범했다. 우리경제는 년초부터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경기불황과 물가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테그플레이션이 시작됐다.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성장만하면 된다는 논리로 팽창정책을 폈다.

그러자 물가불안심리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스테그플레이션이 본격화하여 경제가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주저앉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자 기업부문은 생산과 투자가 극도로 위축된 상태이다. 가계부문은 실업, 물가, 부채의 3중고가 악화되어 연쇄부도위험이 크다.

경제를 이와 같이 위기로 밀어 넣은 최대의 정부실책이 냉탕온탕식 외환시장개입이다. 정부는 출범직후 물가 안정보다는 성장이 우선이라는 기조 하에 수출부터 늘이겠다는 목적으로 외화를 사들여 환율을 높이는 정책을 폈다. 그러나 곧 고환율정책과 원자재 수입가 상승이 서로 꼬리를 물고 물가를 상승시키는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그러자 생산과 소비활동이 한꺼번에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스테그플레이션을 본격화하고 경제가 불황의 함정으로 빠뜨렸다.

정부가 정책기조를 성장위주에서 물가와 민생안정 우선으로 바꾸어 내놓은 정책이 외환보유액을 동원하여 환율을 인하시키겠다는 것이다. 수출 증가를 위해 퍼던 고환율정책을 하루아침에 뒤집고 외환시장을 진압하여 환율을 억지로 끌어내리겠다는 정책이다. 바로 시장기능을 부정하고 냉탕온탕식 정책을 다시 쓴 것이다. 이 정책은 곧바로 경제불안을 확산시키는 뇌관으로 작용했다. 일단 당국이 보유외화를 팔아서 환율상승을 막을 경우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은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정책도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 증권시장에서 외국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경상수지적자가 계속 누적되어 환율은 계속 치솟고 있다.

실로 큰 문제는 정부의 개입이 외환보유액을 소진하고 한계 상황에 처하는 것이다. 그러면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은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터트리는 뇌관이 된다.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이 실패할 경우 우리 경제는 제2의 외환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정부의 지지선이 무너질 경우 증권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무너진다. 기업과 가계부문의 연쇄부도의 위기를 겪는다. 그러면 결국 정부가 경제위기를 자초하는 격이 된다.

설상가상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정부는 쇄고기 파동을 일으켜 국정을 혼란에 빠뜨렸다. 촛불시위는 정부의 주요정책들을 거부하며 정권을 규탄하는 시위로 확산되었다. 결국 대통령은 두 번이나 국민

에게 사과를 하고 청와대 수석과 내각은 총사퇴를 해야 했다. 이를 계기로 정부의 정책 추진동력이 크게 떨어졌다.

문제는 대응이 실패투성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은 경제팀의 전면교체를 원했다. 독선과 무능으로 경제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겸양과 전문성으로 경제에 희망을 불어넣을 새로운 경제팀을 기다렸다. 그러나 747에 매달려 경제기조를 잘못 설정하고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경제위기를 확대시킨 책임을 덮고 여론무마용 희생양으로 차관 한 명을 대리 경질하는 것으로 그쳤다. 국민의 분노가 다시 커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 5. 금융위기 극복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각국이 비상상태이다. 헝가리, 우크라이나, 아이스랜드, 벨로루시, 파키스탄은 이미 국가부도위기를 겪고 있다. 따라서 세계각국이 위기극복을 위해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은 달러의 무제한 공급, 규제금융 확대, 은행 간 대출보증, 예금지급보증, 금리인하 등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다른 나라들도 유사한 조치들을 긴급하게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대거 자금을 풀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1년 예산과 거의 맞먹는 200조원의 자금을 풀어 경영난에 처한 금융기관과 기업들에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에 정부는 미국과 300억달러, 일본과 130억달러, 중국과 40억달러 규모의 통화교환계약을 맺고 외화부족시 수시로 꺾다 쓸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무너지는 실물경제를 떠받치기 위해 내년까지 총 33조원 규모의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를 통해 사회간접투자건설, 중소기업지원, 자영업자 부도방지, 농어촌사업지원, 저소득층 복지지원, 지방재정건전화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여기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0%포인트 내리고 향후 필요하면 추가로 인하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도권 공장건설규제를 폐지하여 기업투자를 유도하고 분당면적의 16배에 달하는 그린벨트를 풀어 공장용지, 물류단지, 택지 등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여 부동산거래와 담보대출을 자유화할 방침이다. 더 나아가 용적율을 300%까지 올리는 등 재건축 규제를 풀어 아파트 공급을 늘일 계획이다. 실로 모든 수

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경제붕괴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위기는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위기로서 쉽게 끝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향후 부실 금융기관들의 퇴출, 통폐합, 구조조정, 정리해고 등 금융산업의 대지진이 일어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산업의 무게중심이 증권에서 은행으로 옮겨오며 갖가지 규제와 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렇게 금융체제가 바뀌고 실물경제와 함께 발전하는 선순환체제가 형성이 되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경제도 일단 부도위기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지원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비상대책체제를 갖추고 외환시장과 증권시장 안정에 모든 정책수단을 다 동원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외국자본의 투기희생물로 전락한 금융체제를 다시 찾아 경제주권을 지키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금융산업이 돈벌이만 치중하는 투기산업이 아니라 실물산업과 연계되어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새로운 서비스 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가 왔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금융기관들 때문에 세 번이나 눈물을 흘려야 했다. 돈관리를 못해서 경제가 부도가 나니까 눈물을 흘리고, 구조조정당해서 일자리를 잃어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금융기관들을 다시 살린다고 공적자금 160조원 투입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정부책임자나 금융기관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추궁은 거의 없었다. 이번에도 금융기관들은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 돈장사에 눈이 어두워 주택담보대출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마구하다가 부도위기에 처하고, 키코 만들어서 중소기업 쓰러뜨린 후, 이제 자금이 없다고 손을 벌리고 있다. 이번에 정부는 자금을 지원하면서 부실의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다음 과감한 인수합병과 구조조정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여기서 국민의 눈물이 섞인 돈으로 몇 억원에서 몇 십억원씩 연봉받는 은행장과 임원들의 임금도 대폭 삭감하여 국민들이 분노를 씻게 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 다급한 문제는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위기로 전이되고 있는 것이다. 높은 환율로 생산비가 올라 공장들이 문을 닫고 있다. 또 생활물가도 올라 소비가 줄고 있다. 금리가 치솟아 가계부와 중소기업부문의 연쇄부도가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수출증가율이 거의 절반으

로 떨어져 경제의 버팀목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현상이 심화될 경우 서민가계, 중소기업, 금융회사들이 뒤엉켜 쓰러지고 실업자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경제 공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인적쇄신 등을 통해 국민의 불신을 씻고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함께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금지원, 금리인하, 감세, 재정지출확대 등 가능한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 기업들은 이익 줄이고 생산비 절감하고 생산성 높여서 생산과 수출을 증가시켜 무슨 일이 있어도 산업현장이 쓰러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 또 세계경제위기가 나중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오히려 투자를 확대하는 공격적 경영을 해야 한다. 여기서 국민들도 허리띠 조르고 근로정신 발휘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하는 저력을 다시 발휘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 6. 경제 발전의 New Paradigm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2004년 세계 11위였다. 그러나 이후 인도, 브라질, 러시아, 호주 등의 추격을 받으며 13위로 물러났다. 향후 15위권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우리경제가 이렇게 뒤로 처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약육강식의 신자유주의 세계흐름 속에서 다른 나라들은 경제성장에 총력전을 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 가한 성장과 분배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였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구축하고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목표를 내 걸었다. 그러자 성장을 주장하면 보수, 분배를 주장하면 진보라는 이분법적인 사회분열이 나타났다. 문제는 참여 정부가 경제와 민생을 분리하여 경제는 수출과 증권시장의 호조에 따라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양극화로 인해 민생의 어려움이 나타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정책은 성장동력의 창출보다는 분배개선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분배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사회갈등은 고조되고 경제는 표류상태에 이르렀으며 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그리하여 실업과 부채의 악순환 속에서 고통을 겪는 서민들을 거꾸로 파산의 수렁으로 밀어 넣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우리경제는 브릭스를 중심으로 하는 후발국가들의 공격에 털미를 잡힌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는 진보와 보수 간의 이념갈등,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빈부갈등, 경영자와 근로자의 노사갈등, 도시와 농촌 간의 도농갈등 등 갈등구조가 다원화하면서 진보와 보수 간의 이념충돌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 가운데 경제양극화가 심화되어 경기가 극도로 침체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경기의 침체는 기업의 매출을 감소시켜 다시 설비투자를 위축시키는 구조적 악순환을 낳고 있다. 경제의 구조적 위기가 재생산되면서 사회분열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경제와 사회가 올바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의 탈이념화가 시급하다. 성장-우파, 분배-좌파라는 도식적 이념을 탈피하고 성장과 분배는 선순환을 구축해야 하는 순수 시장경제 변수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더욱이 성장이나 분배를 정치적 기반을 넓히기 위한 포퓰리즘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물이다. 이러한 사고의 전환과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체제를 발전시켜 건전한 자본주의의 기틀을 확립해야 한다. 그리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한편 우리 경제가 양극화의 덫에 걸려 발전의 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상태임을 감안할 때, 신산업발굴과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운영 패러다임의 도입이 필요하다. '신산업발굴과 중소기업 육성 ⇒ 일자리 창출 ⇒ 고용과 민생안정 ⇒ 경기회복 ⇒ 다시 신산업발굴 투자활성화'의 고리가 양극화를 해소하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회복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

신산업발굴과 중소기업 중심 경제는 사람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어 기업을 일으키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사람의 경쟁력이란 높은 수준의 인적자본을 가진 근로자, 즉 지식근로자가 창의성을 가지고 일을 할 때 나타나는 높은 생산성을 의미한다. 미래 경제는 지식이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로서 자리 잡게 되는 중소기업들이 주역이 되어야 한다.

경제 제1의 목표는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이다. 일자리를 만들기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이다. 기업의 투자활성화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회복하게 하며 동시에 일자리를 늘린다. 이와 같은 일자리 증

가는 소득과 소비를 증가시켜 다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더 만드는 선순환을 가져온다.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도전과 혁신의 기업가 정신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건전한 기업 활동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기업이 존경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두 번째 방법은 정책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 방법에는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 일자리 나누기,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이 있다.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일자리는 국민 전체의 복지와 삶의 질 문제와 관련하여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일자리 나누기는 주 5일제 및 근로시간 단축, 학습체제의 도입 등과 관련하여 우리 경제현실에 맞는 모델의 적극적인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교육 및 직업훈련은 근본적으로 인적자원의 질적 향상을 가져와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 일자리를 근로자가 스스로 지키고 만들게 하는 방법이다.

끝으로 중요한 과제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사회협약이다. 사회협약은 정부와 노사는 물론 사회구성원 모두의 협약으로 도출해야 할 것이다. 협약의 내용은 일자리 나누기, 기업의 투명경영과 지배구조 개선, 한국식 시장경제 모형 합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사안마다 국론이 분열되는 현실에서는 무엇보다도 합의와 설득절차를 통해 결과에 승복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절차민주주의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합의에 도달하고 그 결과를 수용하려는 자세가 사회 각 분야에서 자리 잡아야 한다. 이런 원칙하에 우리 사회는 대타협을 이루어 이념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구축하여 새로운 미래경제를 열어가야 할 것이다.

## 7. 참고문헌

[국문색인]

곽승영 외 3인, 「양극화와 경제정책」, 국가경쟁력 플랫폼, 2006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새정부 6개월 규제개혁 추진 성과」, 2008.8

김광수, 「위기의 한국경제」, Human & Books, 2008.10

손현덕 외 11인, 「MB노믹스」, 매일경제 신문사, 2008.1

조현재 외 5인, 「Mission 10만달러」, 매일경제 신문사, 2008.4

좌승희, 「진화를 넘어 차별화로」, 지평, 2008.9

[영문색인]

Altman, Daniel, 「Neoconomy」, Perseus Books Group, 2004

Collins, Jim, 「Good to Great」, Harper Collins, 2001

Kim W.Chan & Rene? Mauborgne, 「Blue Ocean Strategy」, Harvard Business School, 2005

Lee, Phil-Sang, and Kyung Suh Park, "Origins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ternational Finance Review JAI, 2000

Sanders, Dan J., 「Built to Serve」, McGraw-Hill, 2008

Thurow, Lester C., 「The Future of Capitalism」, Penguin Books, 1996